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대학



강 정 채
전남대학교 총장

최 근 우리들이 매우 자주 말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서울 중심, 경부 축 중심의 발전이 계속되다가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발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토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다행히 지난 몇 년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이 국가적 정책으로 된 것은 늦으나마 위안이 되는 일이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투자와 발전은 우리 사회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는 현상을 낳았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 모델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모형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토의 11.8%에 인구 46%, 국부의 대부분이 집약된 나라는 없다고 한다. 더구나 소위 선진국에서는 그런 형태의 국가 자원의 집약의 예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일극 중심에서 다극 중심체계로의 국토 발전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들을 높인다.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책의 일환으로 168개의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분산 이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기관들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가면 필요한 고급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불평이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82%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어찌 나올 수 있겠는가? 국외자들이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전기관이 옮기는 곳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유명한 대학들이 있다. 그것도 매머드급 대학들이 있다. 학생 수가 2만~3만 명이 되고 전통도 오랜 대학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소위 유명 지방대학들은 그간 무엇을 하였을까? 인재를 기르는 일은 하지 않고 무엇을 하였을까?

“

지역의 대학이 지역 혁신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라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일궈
 인재의 양성을 위한 투자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게 하려면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대학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서울 중심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학의 발전도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학생 정원의 48%가 지방고등학교 출신인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선호하는 대학이 꼭 우수한 대학이냐고 묻는다면 얼른 답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내력이 있으니 시골에서 적잖은 경비를 들여서 서울로 진학했을 것 같다.

한편 지금까지 서울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육투자(국비, 개인투자, 발전기부금, 기업체의 투자)가 행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서울 소재 대학들로 모이고, 그들 대학 졸업생을 사회에서 우대하는 풍조마저 생겼다.

그런데 국토의 일극 중심의 발달이 기형적이며 타기해야 할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재의 육성도 서울 중심으로만 양성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공부한 학생들의 7할은 지역에서 일터를 잡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3할은 서울로 가는데,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인재의 4% 정도만이 지역으로 돌아가 일하는 것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지역의 일꾼들이 지역대학 출신들이란

것은 짐작이 간다.

지역의 대학이 지역 혁신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라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일궈 인재의 양성을 위한 투자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게 하려면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대학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다고 걱정하면서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키우는 일에 각별히 힘쓰지 않는 것은 국가발전을 염려하는 정책이 아니다. 지역경제에는 지역의 인재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튼실하게 키우는 일에 힘쓸 때 열악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는 젊은 도전적인 일꾼이 이미 갖추어진 서울의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만큼 귀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학교육의 현황과 그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학생비가 4:6이고 대학의 숫자도 4:6이다. 그런데 투자의 비는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 7년 전에 시작한 BK21 사업을 보면 1년간 총 투자액 2500억 원 중에 지방대학 투자가 500

“

국토가 균형발전해야 하듯이 대학의 우수한 연구력들에게
 골고루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고, 국가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일책이라고 감히 제언한다.

그것이 곧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정책적 배려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

역 원이었다. 그 결과로 지방 유명 대학의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대부분을 서울로 빼앗겼다. 그래서 연구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교수들이 적지 않다. 같은 연구실험비를 받는다면 일 자리를 구하기 쉬운 서울 지역으로 찾아가기 때문이다. 학생 개인을 말할 수도, 나무랄 수도 없다. 또 이내 시행해버린 정책을 돌이킬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국가사업에서는 이런 현상을 시정하는 시도를 해볼 일이다. 새로 시작되는 소위 POST BK21 사업은 1년간 투자자 3000억 원인데, 1차 BK21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한다. 7년 전에도 이미 오랫동안 서울 중심의 사회적 투자에 의해 경쟁력의 차이가 많았는데 이제 7년간 집중투자를 한 후에 또 다시 서울 중심으로 배정될 것이 뻔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면 이는 불균형을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왜 불균형은 시정되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위주로 투자되던 국립대학교 지원이 지방 국립대학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 지방국립대학은 중

은 학생들을 서울로 보내게 되었다. 정말로 각고의 노력으로 학부학생을 키웠는데, 그 학생들이 대학원을 지망하면서 또 서울로 가게 되어서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연구역량도 있고, 열의가 있는 교수들이 많은데도 학생지원비가 서울에 편중 배정되기 때문에 대학원생마저 서울로 빼앗기는 기막힌 형편이다.

이번에는 누가 뭐래도 지방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을 나누어서 1년 3000억 원의 POST BK21 사업비를 5:5로 나누어 집행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불균형 지원을 다소라도 만회하게 하여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국토가 균형발전해야 하듯이 대학의 우수한 연구력들에게 골고루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고, 국가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일책이라고 감히 제언한다.

그것이 곧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정책적 배려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